

● 대학·연구기관도 영리활동 가능

중소기업청은 제조업 창업 부진*,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감소와 기존의 개인중심의 창업에 따른 높은 실패율*** 등을 개선하고자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제조업 신설법인 증감률(% , 전년대비) : (2004) 11.0 → (2005)14.8 → (2006)9.4
-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 (2003) 37.2% → (2007.4)15.6%
- ***창업 실패율(2003년 기준 창업 5년차) : 68%

※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이번에 발표한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의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①대학(산학

협력단 포함), ②국공립연구기관, ③정부출연연구기관, ④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비영리법인(과학 또는 산업 분야)이며, 대학·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고 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전문회사에게는 교원·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평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며, 전문회사는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거나 자회사를 설립(대학 제외)하여 사업화할 수 있으며, 대학 등에서 투자받은 창업보육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산학협력 등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나 부서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기술창업으로 선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 도입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해당기관 부지에 도시형공장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집적지역은 지정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

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임원 구성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이내인 자 등 제외
주요 사업	• 보유 기술의 직접사업화, 자회사 설립(대학 제외)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각종 실험실 창업 지원 등)
수익의 활용	•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주식 소유	• 대학·연구소가 30% 이상 소유
행위 제한	• 유사 수신행위 금지 • 자회사와의 채무보증 등 금지

이 되고 전체 부지의 30% 이하이어야 하며, 공장설치가 불가한 전용 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정된 집적지역에는 '비공해형 도시형공장'과 '관련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공유지이더라도 임대(20년+연장 가능)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국유재산법 상은 5%)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또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의제되어 공장 설립 절차가 완화되고 개발부담금 등 5가지의 부담금 완화와 미술장식 설치 의무의 면제도 주어진다.

3. '교수 연구원 창업 여건' 개선

교수·연구원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험실 공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가능하던 교수·연구원의 휴직대상을 창업·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실 공장 설치 면적을 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제조시설 설치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청 송중호 창업벤처본부장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발전이 강화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마련·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계·문화계·출판계 등 인문학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인문학진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 17일에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370억 원(신규 증액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

지정 절차	1. 집적지역 지정 신청 (대학연구소) → 집적지역 개발계획 → 2. 집적지역 지정 요건 검토(중소기업청) → 일정 면적 이상 → 3. 집적지역 지정 협의 (광역시·도)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 비율이 30% 이하 • 지정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 집적지역개발계획이 타당할 것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의제(도시 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국토법 제76조제1항 적용 배제) • 각종 부담금 및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

[교수 연구원 창업 여건 개선]

형태	형태
휴직기간	• 3년 → 1회 추가연장 허용(3년, 기관장이 판단)
휴직 허용 대상	• 벤처기업 → 벤처기업 + '창업기업' 까지 확대
실험실공장 면적	• 500제곱미터 → 3,000제곱미터로 확대
실험실공장 활용	• 퇴직시 2년 이내 실험실공장 연장사용 허용

3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2007~2016년)간 약 4,000억 원 이상을 인문학 진흥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 및 예산〉

- 연구
 - 인문학 분야 '대학거점연구소(단)' 육성(150억 원)
 -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50억 원)
 - 한국학 분야 기획연구 지원(45억 원)
 - 저술 및 출판 지원(20억 원)
- 교육
 - 인문학 분야 교양교육 강화 및 인문장학금 설치(71억 원)
- 사회
 - 인문학과 사회의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 조성(27억 원)

1. 연구 부분

- ① 대학거점연구소(단)
 - 인문학 분야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선정된 '거점연구소'나 중·소규모 연구소가 협력하는 '거점연구단'을 20여 개 선정하여 향후 10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
- ② 지역학 연구소
 - BRICs,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남미 등 세계 각 지역/국가의 언어, 문화, 종교, 역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총체적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학 연구소를 향후 10년간 20개(권역별로 4~5개 정도)를 선정,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인문학의 능동적 대응력을 배양할 계획
- ③ 한국학 기획연구
 - 한국학 분야에서 꼭 필요한 연구를 위

해 한국학 분야 연구소(단) 10여 개를 개 선정 지원하여 연구과정에서부터 외국대학과 공동연구하고, 해당 지역 언어로 출판하게 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교육 부분

- 기초학문 발전 및 전공학습의 토대로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여 개 대학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지원
- 지방대학역량강화사업(NURI) 및 수도권 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인문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화하며, 고전 번역 등 기초학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에 지원을 확대하여 순수 인문학 연구 분야에 창의적인 연구인력을 양성할 예정

3. 사회 부분

- 인문학의 일반 대중 및 타학문과의 만남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글날 전후에 '인문주간'을 설정하여 인문학 대중강연, 전시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공학도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발하여 인문학자와 자연과학자(공학자)간의 공동학술세미나를 통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상호 역할 보완 및 공동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대학원대학) 설립기준 완화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 대학에 대한 설립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교

육기관 중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사(校舍) 최소 면적 기준 또한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다.

이러한 설립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외국 교육기관 중 대학원대학의 국내 진출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 인적자원정책본부 7월 출범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인 고급 인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및 경제부처 관료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오는 7월 출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직제를 개정해 1급 관료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밑에 인적개발 담당 직원과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 직원, 민간인 전문가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만들어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토대로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목표와 지역 및 민간 부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능력 향상,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및 남북교류 협력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책본부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보 생산과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해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독려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일례로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력개발비의 세액을 공제하고 신용평가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책본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수준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영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정책도 수립하게 된다.

● 정부, 뇌연구에 492억 원 지원
- '2007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5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2007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07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뇌 분야 연구에 총 4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 262억 원(53%), 보건복지부 73억 원(14.9%), 산업자원부 36억 원(7.3%), 교육인적자원부 23억 원(4.8%), 기타 97억 원(19.8%) 등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1994~2007)'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계획인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하고, 국가 뇌연구소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 시행계획은 뇌연구촉진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뇌 분야는 21세기 인류가 개척해야 할 최후의 과학기술 영역이자,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뇌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의 세계로 남아 있으며, IT·BT·NT 등 신기술이 융합되어 타 학문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7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 2007년도 정부 투자계획〉
■ 2007년도 정부의 투자계획은 총 492억 원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

-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수집
- 국가적 차원의 뇌연구소 설립 계획(안) 마련
- 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강점 분야 지원 강화

1.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 2017) 수립

-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뇌연구 비전 및 중·단기 목표 정립
-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협력 등 기능 분야별, 뇌신경, 뇌정보, 뇌의학, 뇌인지 등 기술 분야별 정책추진 방향 및 로드맵

2. 국가적 차원의 뇌연구소 설립 계획(안) 마련

- 국가 뇌연구소 설립 추진위(이후 추진위) 구성·운영
-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 수립에 포함하여 검토
-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국내 뇌연구기관의 연계가 가능한 국가 '뇌연구소' 형태로 추진

3. 뇌연구 인프라 구축 및 강점 분야 지원 강화

- 사업단 및 연구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단 간 연계와 교류 확대
- 뇌과학 기초학문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뇌 특이적 유용 유전자 발굴 및 검증
- 인공두뇌(Digital Brain)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질병진단용 지능형 생물정보처리시스템 개발
- 뇌질환, 뇌·신경정신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 뇌질환 극복을 위한 생물학적 기반 지식 기반 마련
- 뇌의 구조와 기능의 종합적 이해를 증진 및 MRI 등을 활용한 뇌 영상 기술 개발 등

●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 평가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 2004년부터 지원된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3년간의 지원결과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중간평가)를 발표하였다.

2004년에 부산대(차세대 물류 IT 기술연구사업단), 전북대(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단)가 1차적으로 선정되고, 2005년에 전남대(전통재료와 첨단공법을 융합한 바이오 하우스 개발연구단), 충북대(충북 BIT 대학육성사업단)가 2차적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선정년도부터 10년간 매년 25억 원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 산업화 연구개발 거점 대학으로 육성된다.

학술진흥재단은 금번 평가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2004년 이후 3개년간 지원된 부산대 및 전북대 사업단에 대한 중간평가로, 사업단이 제시한 목표와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단별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사업단이 제출한 자체평가결

[2007년 부처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

부처 계획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 자원부	정부출연(연)	합계
2007년 계획	26,190	7,340	3,610	2,340	9,720	49,200
비율(%)	53.2	14.9	7.3	4.8	19.8	100

과, 실적보고서, 향후 연구계획서 등을 토대로 전공심사 → 면담심사 → 현장심사 등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평가단은 해당 사업 특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2/3 이상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04~2006년) 지원된 부산대와 전북대에 대한 평가 결과, 부산대는 부산 지역 전략 산업인 '항만물류'에 부합되는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 기간 중 SCI급 논문 발표 82건, 국내외 특허출원 26건, 관련 분야 167명의 석·박사 인력 양성, 연구보조원의 관련 분야 취업 123명, 지역산업체와의 기술이전(6개 기업)을 통한 산학협력 증진, 자치단체의 참여 지원 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산업체가 상용 가능한 'RFID 미들웨어에 관한 기술과 433MHz용 능동용 RFID 리더 및 태그에 관한 기술' MD 4개 기술을 개발하여 6개 기업에 이전하여 2억 7천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과 현재 진행 중인 5억 3천만 원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액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협력대학 간 연계체제에서 일부 미흡함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헬스케어 기술개발사업단)는 기간 중 SCI급 논문 발표 133건, 국내외 특허출원 72건 등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었으나, 인력 양성(석·박사 97명), 관련 분야 취업 54명, 주관 대학과 협력 대학 간 시스템적 협력체계, 자치단체 참여 등에서 실적이 낮아 종합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학술진흥재단은 해당대학이 지역특화 미래원천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지방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고, 지역산업에 기여하는 산업화 연구 개발 거점으로 조기 정착 및 촉진될 수 있도록 금번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도 예산지원 시 부산대에는 당초 지원예정액인 25억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6억 5천만 원을,

일부 미흡함이 발견된 전북대에는 당초 지원예정액인 25억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삭감된 23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더불어 학술진흥재단은 동 사업 추진기간이 중반기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에도 해당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업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 간 재정지원 폭을 더 확대하여 대학 간 경쟁과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체제 강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형 MBA 2007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 및 운영 현황 분석·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20일 한국형 MBA 과정인 11개 경영전문대학원의 2007년도 상반기 신입생 모집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작년 9월 7개교의 경영전문대학원이 개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한 한국형 MBA는 올 3월에 4개교가 추가로 개교하면서 총 11개 교가 되었다.

- * 2006년 9월 개교 :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 * 2007년 3월 개교 :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1. 과정별 모집 현황과 경쟁률

11개 대학에서 1,168명 모집에 3,116명이 지원하여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다.

Full-time(주간) 학생을 모집한 대학은 9개교(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정보통신대, 한양대)로 총 352명 모집 정원에 461명이 지원하여 평균 1.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종 301명을 선발하였다.

Part-time(야간 등) MBA 신입생을 모집한 대학은 9개교(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로, 총 816명 모집 정원에 2,655명이 지원하여 평균 3.3: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최종 736명을 선발하였다.

2. 한국형 MBA의 국제화 추진 현황

외국인 입학생은 성균관대 8명, 서강대 5명, 연세대 3명 등 총 16명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재학생은 성균관대 44명, 고려대 22명, 연세대 12명, 서울대 6명, 서강대 5명 등 총 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0명), 인도(7명), 러시아(7명), 베트남(6명), 캐나다(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저명교수의 초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수는 서울대 21명, 고려대 10명, 성균관대 6명 순이며, 9개 대학에서 총 51명의 외국인 교수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31명(6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총 29개 과정 중 26개 과정(90%)에 영어 강의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그 중 7개 주간 과정은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Full-time 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각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MBA과정 입학생의 구성을 보면, 직업 경력을 가진 학생은 815명으로 전체 입학생(949명)의 86%를 차지하여 MBA 수업의 장점인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시행할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파견된 인원은 280명으로 전체 입학생(949명)의 30%이며, 향후 대학에서 한국형

MBA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국내 MBA에 대한 평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대학의 MBA과정 중 특화 프로그램

동국대의 CO-MBA과정은 문화경영 분야를 특화시켜 연극영상, 공연전시, 웹관련 산업의 전문 경영자를 양성하고자 하며, 인턴십과 실제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동아시아 특화 과정(Asia MBA)을 개설하여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대학과 교과과정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호프피탈리티 산업 분야의 특색화를 위해 프랑스의 Le Cordon Bleu와 제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학 중 최소 1회 이상 호주, 일본, 멕시코 등의 자매 프로그램에서 현지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는 IT 특화 과정을 개설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미래 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25일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1. 시간제등록제 정원 외 독자적 별도 모집

- 현재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의 일정비율(수도권 소재 대학 10%)에 한하여 모집되는 시간제등록제에 대하여 앞으로 별도반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독자적 모집단위에 의한 시간제등록자 모집(총 입학정원의 10%)
- 모집 분야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학과와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간호·보

건·의료 및 사법계 등의 관련 분야 모집은
 불허

2. 시간제등록제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간제등록자의 학위취득 소요기간 단축 (매학기 최대 취득 기준학점의 1/2 → 2/3 로 확대)
- 수업일수 규정(매학년도 30주 이상)을 탄력적으로 적용, 온라인 수업·주말 등 특정 기간을 활용한 집중수업 허용

3.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대

-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습과정까지 확대하여 과정 수료자에게 학점 인정
- 또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재직자 교육·훈련, 직무연수 프로그램 및 공공시설 활용 프로그램까지 평가인정 확대

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범위 조정 및 학위취득 기준 강화

- 자격증 취득 인정학점 기준 하향 조정
- 타 전공 이수자 범위 확대 및 타 전공 학위 취득 이수학점 기준 강화

5. 학점은행제 학습자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 등록 수수료 면제
- 온라인 종합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정보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로, 고등교육기관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로 넘어와 공표되면 내년 5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대학정보공시제’로 불리는 특별법에 따라 공개되는 것들은 대부분 교육여건과 학교 운영 상태에 관한 것들이다. 졸업생 취업률을 비롯해 충원율, 교수 확보율,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수 연구성과와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등 연구에 관한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내년 5월부터는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교육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개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와 그 시기, 정보 공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보공시제가 시행돼 개별 대학별로 취업률 등이 공개되면 수험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 수요자들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201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수시 1학기 모집, 수시 2학기로 통합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 모집과 통합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추가

모집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모집은 수시 1학과와 수시 2학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수시모집은 대학이 학생을 연중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7학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2학년도부터는 학생 선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시 1학과와 수시 2학기로 구분하고, 수시 1학기 모집을 통해 입학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수시모집제도는 그동안 대입전형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학생의 복수지원기회를 확대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왜곡, 연중 입학업무에 따른 고교 교사들과 대학 입학담당자

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작년 4월, 학교 현장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 모집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안하였으며, 교육부는 작년 8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과 수시 2학기 모집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사항으로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예고 이후 그동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 및 연구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 수시 1학기 모집과 수시 2학기 모집 통합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이를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